

현안과제연구
2010. 6.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 백운성·신동호·임준홍·김양중·임형빈

목 차

1. 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 / 1
2. 재래시장 활성화 / 11
3. 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 / 17
4. 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 / 22
5. 수요자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방안 / 27
6. 산업단지 개발분야 경제정책 운영방향 / 33

본 과제는 민선 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과제로
경제산업정책의 분야별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1. 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

공간계획연구부 백운성 책임연구원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글로벌 트렌드 변화

■ 세계경제의 블록화 진행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현재의 세계경제는 북미(NAFTA), 유럽(EU), ASEAN+3 등으로 세계경제 및 정치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대경제 블록화 구조가 정착될 전망
-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지역적 이점이 큰 국가들이 함께 뭉쳐 타 블록이나 개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뒤, 다시 블록(경제권)내에서 2차적 경쟁을 하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경쟁의 양상
- 우리나라는 ASEAN+3를 중심으로 역내 FTA체결확대에 따른 교역 및 투자확대와 금융 및 통화부문에서의 협력강화 등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시점

■ 동아시아의 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부각

-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의 영향증대로 환황해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
-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면에서 NAFTA, EU에 이은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중·일 3국간의 교역 및 투자는 급증하는 등 역내 경제의존도 증대
-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적 중심거점의 역할이 남동해안에서 중국·인도 등의 아시아진출에 유리한 서해안으로 경제권 이동이 진행중

■ 녹색성장시대로의 이행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Green Growth)개념에 주목
 - Greenomics(Green+Economics)의 부각;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구
- 충청권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단지, 화력발전소, 철강산업단지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 저성장시대로의 진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980년대의 7.5%, 1990년대의 6.2%에서 5%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오는 2012~2025년의 한국 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OECD보고서)
 - 낮은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와 함께 고용창출력이 낮은 첨단산업으로의 이행은 '저성장-저고용'의 문제를 초래
- 충남은 지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 있어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00년~2008년 제조업비중변화(부가가치기준) : 충남 34.0%→49.8%, 전국 25.9%→28.8%
- 그러나, 제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임금상승 및 설비자동화 등으로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충남의 고용없는 성장 정도는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취업계수:전국평균 23.9명 vs. 충남 17.9명).
 -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10만명 정도 증가했지만 현재는 5만~6만명대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

■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 노인인구(659만명)가 유소년인구(654만명)를 추월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령화진입(2000년, 7%), 노인인구 500만명 돌파(2008년), 고령사회진입(2018년, 14%), 초고령사회 진입(2026년, 20%)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 중 가장 높으며, 반면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향후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 충남지역은 2005년에 이미 노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 경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24.3%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재정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정책을 요구케 되었으며,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2. 최근의 지역산업정책 동향과 충남의 당면과제

1) 최근의 지역 산업정책 동향

■ 공간중심의 3차원적 지역개발정책의 도입

-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의 전개로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경제권과 서해안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은 충청권 지역발전에 커다란 계기
- 충남은 광역권(대전,충남,충북)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기반산업의 세계적 혁신거점을 조성할 가능성과, 서해안발전계획(초광역계획)의 추진으로 세계진출의 교두보 조성에 기회를 맞음
- 반면, 권역내 시·도들간의 유사산업들간의 경쟁구조의 격화 문제와 이로 인한 권역내 연계협력 등의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이 난제로 부상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감성형시대에 대응한 신성장동력 육성

- 최근 IT, BT, NT기술간 융합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 기술과 영역간의 경계를 넘는 기술혁신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
- 기존 동종, 이업종간의 융복합화를 넘어 인간과의 융복합화에 대응하는 감성형 기술 개발이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대두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신성장동력, NBIC 국가융합기술지도 등 국가적 차원의 융합기술·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기업집단의 이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시적 정책목표의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의 잠재성장률까지 약화시킬 수 있음
- 충남은 수도권의 인접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이 증가한데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2000~2005년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기업 중 총 844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

중 14%에 해당하는 126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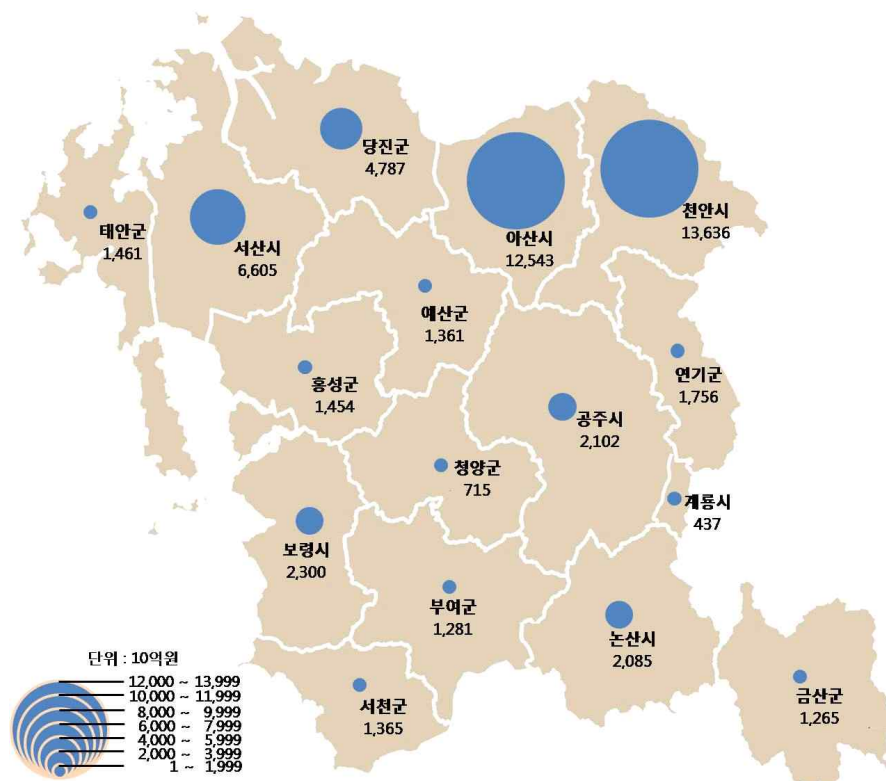
-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충남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 충남 산업경제의 최근 동향과 당면과제

■ 전국최고의 경제성장률 시현, 그러나 시군간 경제력 격차 증대

- 2000년 이후 충남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외자유치를 주요전략으로 채택
- 이로 인해 충남은 2000년 이후 GRDP 성장률 9.0%로 전국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외투기업 유치 등의 발전을 이룸
-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면에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이 GRDP(2007년)의 68.1%를 차지, 그 외 12개 시군이 31.9%를 차지

[그림 1] 2007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¹⁾



1) 2007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추계결과,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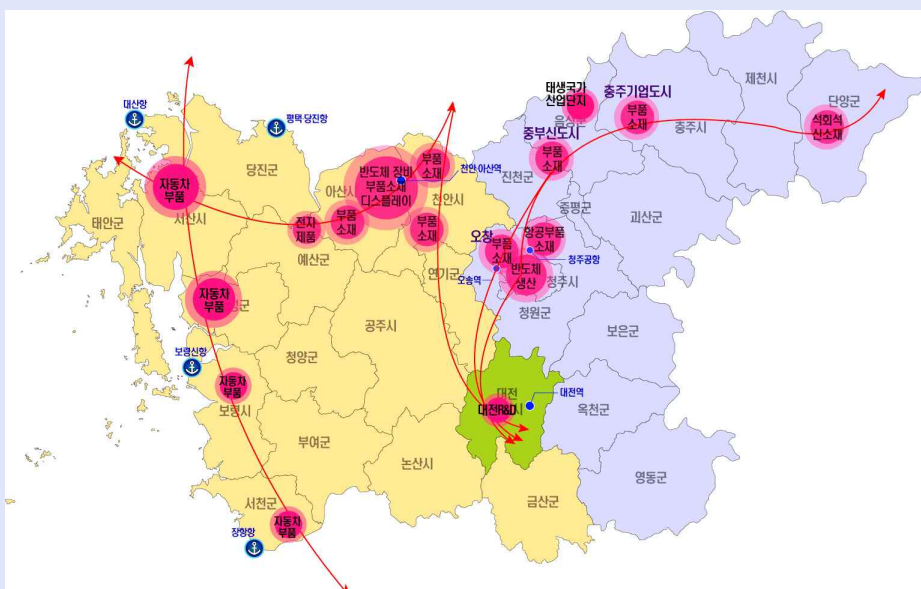
■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재편에 따른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 육성

- 2단계 4+9진흥계획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고, 그동안 4대전략산업을 지원했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산업정책도 기존의 개별 기업이나 부문 중심의 정책에서 광역적 협력을 요구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경제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군집(거점 지역, 기능·특화 지역)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광역권 협력 유도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상과 IT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이 필요
- 이와 함께 충남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육성하였던 지역 4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

■ 충남을 포함하는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과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따라 점차 서해안 및 내륙으로 확대되는 경로의존적인 산업발전형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향후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충청권 상호 공조를 통한 IT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기반 BT산업 등으로의 영역확대가 필요

[그림 2] IT 융·복합산업 집적지 및 확산경로²⁾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충청권)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저탄소화,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

-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기본법에는 녹색 경제산업 육성지원, 환경 친화적 세제 운영,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공공기관에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
- 충남은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집적으로 인해 전국 최상위 수준의 CO₂ 배출지역(1인당 배출량 15.21탄소톤, 전국평균의 4.6배)임
- 따라서 기존 탄소배출산업에 대한 저탄소화 지원정책의 입안과 추진, 배출권거래, 녹색산업의 발굴 등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 그동안 충남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하여 한 것으로 부가가치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산업의 49.8%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이 계획입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충남은 산업의 급성장과정에서 개별입지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초래
 - 1995년 500개미만이던 충청남도 개별입지 공장수는 불과 4년만인 1999년 1천개이상으로 증가, 또 4년만인 2003년 2천개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4천개를 넘어섬
 - 개별입지 공장수 4,308개, 용지면적 4,454.9만m², 건축면적 1,899.5만m²(2008년 6월 기준)
- 개별입지의 문제는 환경오염문제,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기반 악화, 지가에 대한 부작용,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사회적 비형평성 등의 문제를 초래
- 따라서 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환경개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지역산업메니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제도 등에 대한 계획적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

■ 지역의 경제산업정책에 발맞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 등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창출의 중심은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생산자서비스업 지향의 일자리 창출 필요
 - 단순 서비스업 지향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복합 고용전략의 모색
- 이와 함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역정착이 중요한 과제

3. 충남 산업경제정책의 방향 정립

1) 산업경제정책 기초의 방향설정

■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관리에 중점을 둔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 시·군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고, 도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성장 이외 시군별 특화(전문)화된 산업정책의 방향 요구
- 다각화된 기업지원에 대한 서비스수요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의 유치·지원·관리 등의 통합적 관리
 - RASS(Real service, After care, Single gateway, Single window)시스템 도입³⁾
- 신규 산단조성보다는 기존산업단지의 시설현대화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제도 등에 대한 계획적 대응
 - 도내 각 권역의 경제 및 산업 활동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특화 산업단지 조성 및 낙후산업집적지의 현대화 추진
 -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 지역민 및 지역기업들에 대한 경제정책정보 및 생활경제 정보제공을 통한 도정의 지속성 확보 및 경제교육을 통한 미래형 마인드 제고

■ 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육성

- 기존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산업 여건 및 가용자원 규모를 고려한 IT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전략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녹색화 추진 및 녹색산업 육성
 - 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 IT기반의 융·복합산업 육성
 - 자동차 및 자동차산업 연계를 통한 Green Car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네트워크형 광역클러스터화 추진
 - 4대 전략산업별 집적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의 유치와 동종·유사업종 중심으로 산업집적화 추진

3) 첨부 참조

및 네트워크형 연계체계 구축

- 생산단지과 교육,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통합된 복합 클러스터로 육성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식의 창출 및 공유

○ 산업의 구도화 및 재구조화

- 쇠퇴산업 및 탄소·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의 저탄소화 및 퇴출 유도 및 지원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의 적극적인 대응

-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한 녹색성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산업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은 미흡
 -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계획 및 충남의 R&D능력, 녹색산업 육성전략,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의 추진 계획, 기후변화협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 또한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세부적 추진전략 마련
 - 기존 검증된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세부적 실행계획 마련 및 체계적 사업추진
 - 융합녹색기술지대, 태양에너지 제조장비클러스터, 그린카 클러스터, 녹색 LED/OLED응용기기 산업기반 구축 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기업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규모의 총량 확대를 통한 고용총량의 확대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고용전략 추진
- 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및 지원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산자서비스업의 창업촉진 및 지원
- 사회 서비스 공급확대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2) 정책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1) 지역 산업경제분야 정책관리를 위한 R&D투자 확대 필요

- ‘연구-사업추진-평가-피드백’에 대한 사업관리체계 구축운영
- 새로운 정책추진에 따른 무분별한 계획과 사업수행을 지양하고 부문별 또는 이슈별 조사/연구개발을 통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관리 필요
- 저탄소화 정책,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의 발굴, 산업단지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추진

2) 인접지역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광역·초광역 등의 국가 지역정책에 대응하는 인접 시도간 및 경제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 인접 시·도간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등의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충남에 연고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타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수행하는 공동 연구개발 지원
 - 전략산업별 공동 국제협력(해외 연관 클러스터와의 교류 활성화 지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분야 대학원생 및 해외기술자의 공동 유치 등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지원)
- 전략산업 중심의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 인접시도(경기, 대전, 충북, 전북)간 광역적 경제협력 지원
 -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동차 및 부품산업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디스플레이산업 초광역메가클러스터 구축
 - 대전·충북과 연계한 초광역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전북의 완성차업체와 충남의 부품산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3) 조직 구성의 유연화 및 전략적 대응

- 충남 산업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전담부서의 신설 및 도·연구원·TP간의 연구교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 산업정책분야의 신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 융복합산업 육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산업’부문의 산업정책분야로 일원화 추진
- 기업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첨부:RASS(Real service, After care, Single gateway, Single window)시스템

□ 경제의 생산적 활력부여 및 기업지원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단위(area-based)의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기업의 니즈(needs)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Real service

- 창업, 기술, 홍보·마케팅, 법률·회계, 특허 등 지원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맞춤형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 After care

- 투자유치에서 정착까지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after care) 프로그램 구비

○ Single gateway

- 기업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간 상호연계를 위한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할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 구축

○ Single window

-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2. 전통시장 활성화

공간계획연구부 임준홍 책임연구원

1. 대내외 여건(환경)변화

-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정부는 침체·쇠퇴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 온라인시장의 성장 등 전통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과 소비행태 변화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변화요인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확산, 소비계층 분화 ▪ 소득 증가, 소비 고급화 ▪ 주5일제, 주말쇼핑 보편화 ▪ 맞벌이 부부, 쇼핑시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 소비 참여 ▪ 수입품 증가, 상품 다양화 ▪ 편리한 쇼핑공간으로 이동 ▪ 인터넷 등 온라인 시장 확산

* 자료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국 시장개선과), 2009.1, p.2 참조

<그림 3> 소비행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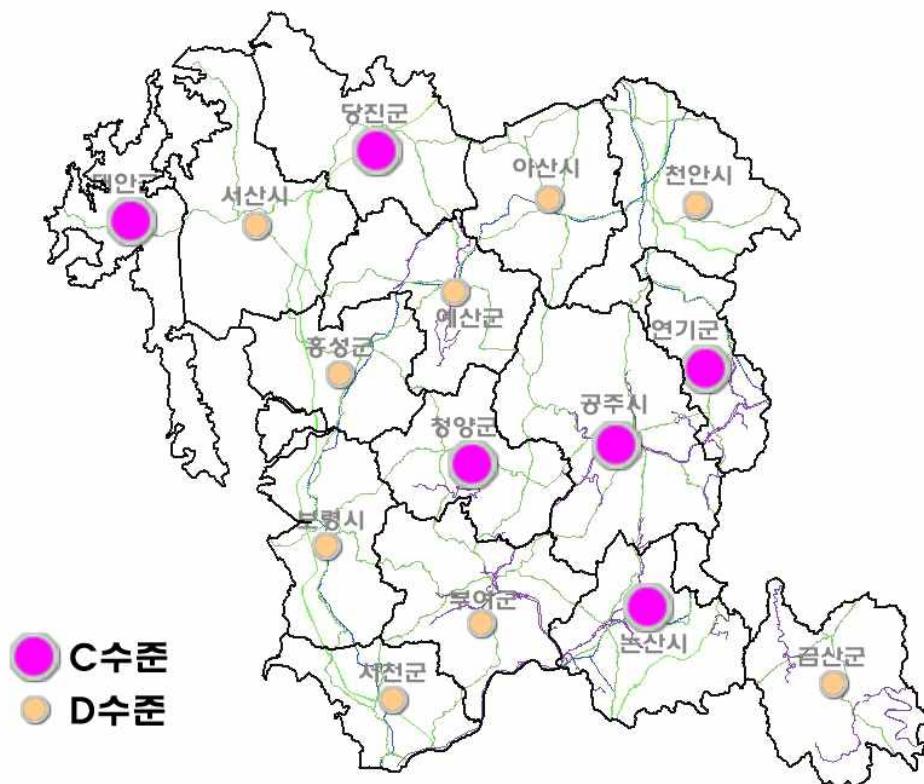
- 특히, 최근 SSM의 증가⁴⁾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09.5)⁵⁾에 의하면 중소유통업의 79%가 SSM의 입점시점을 기준으로, 점포의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41%)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 평균 매출액 34.1%, 고객수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함
- 이에, 정부도 2008년 6월 13일 4곳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물리적 정비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제도와 ‘상권관리자기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7월1일 시행)
 - 재래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일대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입주 점포의 공동 마케팅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점포 수가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점포 수가 400개 이상인 지역이 매출액과 인구, 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2. 현황(추진실태)

4) SSM은 지난 2003년 234개였지만 2009년 현재 580여개로 증가하였다(시장경영지원센터, 2009.7.24, 전통시장 현황과 유통환경, 중소유통정책포럼, p.29 참조). 그리고 이중 충남에는 21개의 SSM이 영업하고 있음

5) SSM 입점 중소유통업 영향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2009.5.21) 참조

- 전국의 전통시장은 1,550개소로 충남에는 75개소가 있으며, 이중 등록시장은 23개소, 나머지 52개소는 무등록 시장임
 - 시장소유별로 보면 공설시장 38개소, 공동시장 25개소, 법인시장인 11개소, 개인시장 1개소임
 - 시장 크기별로는 대형시장 1개소, 중형시장 29개소, 소형시장 45개소로, 소형시장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도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활성화 수준 평균점수는 43.2점으로 전반적인 활성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도는 평균 44.2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활성화 요소별로 살펴보면, 상권매력도가 5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운영이 50.2점, 시설이 45.6점, 상인조직이 42.8점, 점포경영이 39.1점, 공동마케팅이 25.8점으로 상권매력도와 시장운영이 약간 활성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논산시가 52.9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공주시(51.8점), 연기군(49.0점), 당진군(47.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여군·예산군(40.8점), 보령시(38.4점)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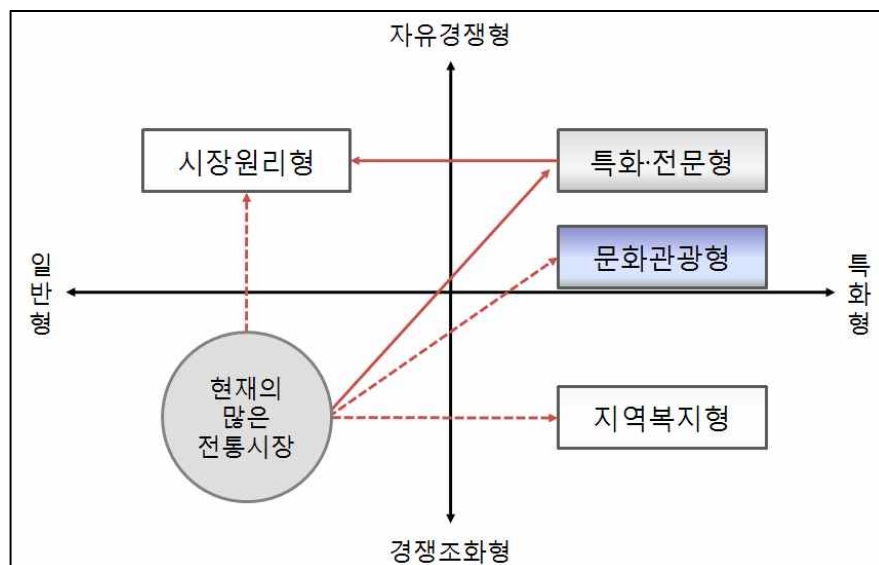
<그림 4> 충남 시군별 전통시장 활성화 정도

3. 목표(비전)

- 충남의 전통시장 활성화의 정책 목표는 개별 전통시장과 상인 중심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보다 큰 목표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상인이 함께하여, 대형마트와 SSM과 공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 이에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비전)를 “지역민을 위한, 지역상권 중심으로 전통시장 육성”으로 설정

4. 정책방향

- 충남의 75개 전통시장은 시장경쟁원리와 전통시장특성에 따라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즉, 현재 특색 없는 3영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1·2·4영역의 시장으로 전환·육성하여야 하며, 생존력이 약한 시장은 과감히 기능 전환을 유도함
-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이 있고, 지역의 역사문화가 있으며,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장은 ‘특화·전문형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1영역)으로 전환·육성
- 입지나 규모 등에서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시장원리형시장’(2영역)로 전환·육성
- 시장원리에 경쟁할 수 없거나 특성화가 힘든 전통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형시장’(4영역)으로 전환·육성



<그림 5> 전통시장 유형화의 개념

5. 추진전략

(전략 1) 시장원리형 시장육성 : 상권활성화구역 제도 활용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상권 강화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함
 - 이를 위해서는 ‘상권활성화구역제도(2010.7.1시행)’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2010 하반기 도시재생지원법 제정 예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충남 75개 전통시장 중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전통시장은 20여곳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 준비중 2010 2곳, 2012년까지 20곳 육성예정
- 상인 위주의 사업보다는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사업제안제도’ 도입
- ※ 협동사업제안제도 : 주민·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도나 시군이 심사하여 지원하는 제도
-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남도, 시군차원의 조례 제정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SSM과 상생발발전하고, 도시의 발전지향적 공간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가칭) 상업환경만들기 조례’ 제정·운영

□ 후쿠시마현 상업 마치고꾸리 추진에 관한 조례

- 후쿠시마현(福島県)은 현의 미래발전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대형점의 적정 입지와 상업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현 상업 마을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기본방침도 책정함.
- 대형마트(매장면적 6천㎡ 이상) 출점 시 수속절차에 앞서 계획단계에서 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함.
 - 대형마트 입점이 현의 기본방침이나 토지이용계획과의 마찰 유무, 교통시설 등을 검토
 -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입지장소의 재검토 등을 권고
 - 출점 예정인 사업자는 신설신고서를 현에 제출하고, 설명회를 통해 당해 시정촌(市町村)은 물론 주변 자치단체에도 설명

(전략 2) 문화관광형, 특화전문형 시장 육성 : 상품과 장소의 차별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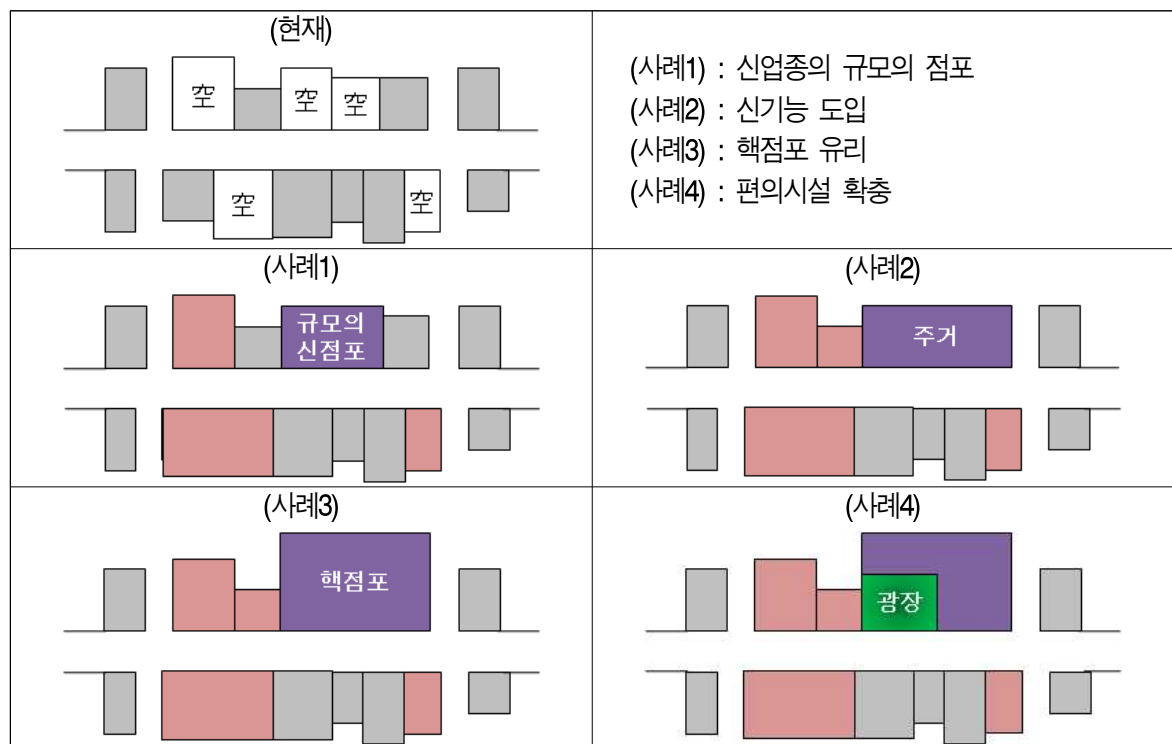
- 역사와 유래를 갖고 있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SSM과 경쟁 및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전

통시장이 가진 문화를 활용하여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도는 문화를 접목한 전통시장 활성화

- 그 수단의 하나가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스토리텔링, 지역축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 시범사업 등과 연계

(전략 3) 지역복지형 시장으로 전환 : 시장의 역할과 공간을 재검토하여 시장력을 잃은 전통시장을 주민 편의시설 등 타용도로 전환

- 상업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전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내부 시설·공간, 기능을 대폭적 조정하여야 함.
 - 활성화되지 않아 빈점포가 증가하는 시장의 경우 과감하게 빈점포를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한편, 활성화되는 시장은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재생이 모색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용도지역 변경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그림 6> 점진적 시장 정비 이미지

(전략 4)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전통시장 육성 :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전통시장에는 고령자, 여성 등 많은 취약계층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임

-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시설비지원, 경영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에, 전통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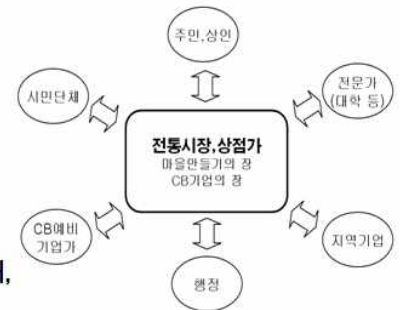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전통시장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캐리어서비스, 클린서비스, 택배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사무실이나 필요 시설공간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 토와긴자상점가의 아모르도와

- 중심상점가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들이 설립한 주식회사(1990년)
- 매출액 : 5억4천만엔
- 주주배당 : 순이익의 5%, 나머지는 회사 축적
- 주요 사업 : 종합병원 식당 운영, 학교급식위탁, 고령자 대상 도시락 택배, 지역대형마트 청소, 방과후 교실(빈점포 활용)
- 효과 : 일자리 창출(200여명)



3.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지역정책연구부 임형빈 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신동호 책임연구원

1. 현황

(1) 취약한 서비스산업 기반

- 2008년 현재 충남지역의 서비스업체는 119,547개소, 고용규모는 436,988명으로 전국 대비 각각 4.1%, 3.4%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체업체수의 29.3%(종사자수 기준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24.6%(종사자수 기준 16.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8%(종사자수 기준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하수·폐기물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충남 서비스업 현황(2008)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2,940,860	12,963,422	119,547	100.0	436,988	100.0	4.1	3.4
전기가스수도	1,412	68,029	94	0.1	4,944	1.1	6.7	7.3
하수폐기물	4,882	62,895	272	0.2	3,458	0.8	5.6	5.5
건설	94,688	872,821	4,096	3.4	30,506	7.0	4.3	3.5
도소매	859,794	2,544,849	35,001	29.3	83,305	19.1	4.1	3.3
운수	340,522	927,042	10,830	9.1	26,942	6.2	3.2	2.9
숙박음식	623,915	1,727,882	29,456	24.6	72,159	16.5	4.7	4.2
출판영상방송	23,706	420,129	521	0.4	5,804	1.3	2.2	1.4
금융보험	37,493	666,466	1,523	1.3	18,777	4.3	4.1	2.8
부동산임대	125,078	434,607	4,027	3.4	11,085	2.5	3.2	2.6
전문과학기술	66,500	689,741	1,848	1.5	11,662	2.7	2.8	1.7
사업지원	31,287	661,749	1,074	0.9	10,845	2.5	3.4	1.6
공공행정국방	12,033	575,148	889	0.7	26,913	6.2	7.4	4.7
교육	159,940	1,311,869	5,942	5.0	54,433	12.5	3.7	4.1
보건사회복지	94,027	889,988	3,747	3.1	33,430	7.7	4.0	3.8
여가관	100,900	314,394	3,772	3.2	10,600	2.4	3.7	3.4
기타개인서비스	364,683	795,813	16,455	13.8	32,125	7.4	4.5	4.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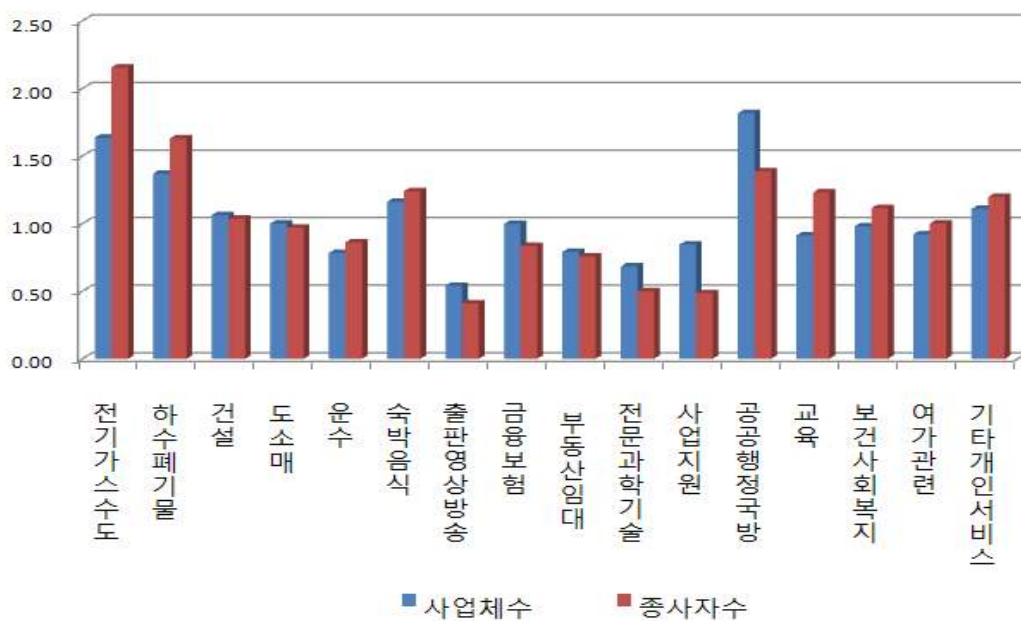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 건설업 등은 업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아 타 서비스업에 비해 대규모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소비자 서비스업 위주로 특화

- 2008년 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 숙박·음식, 공공·행정·국방,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이들 업종만이 타지역에 비해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업종은 운수, 출판·영상·방송, 부동산 및 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이들 업종은 타지역에 비해 취약한 실정임

<그림 7> 충남 서비스업종별 입지계수(2008)



(3) 기업지원 서비스업 기반 취약

- 2008년 현재 지역 내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전국대비 각각 3.2%, 2.1%로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기업활동 및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가 업체수 기준으로 전국대비 1.1~4.5% 수준에 그치고, 종사자 기준으로 0.2~3.7% 수준일 정도로 매우 취약한 형편임
 - 기업지원 서비스업체의 규모도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준임
 - 충남의 업체 당 종사자수는 9.1명으로 전국평균 14.3명 보다 적어 규모가 영세하여, 지역

제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표 2> 충남 기업지원 서비스업 현황(2008)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사업체수(A)	종사자수(B)	업체규모(B/A)	사업체수(A)	종사자수(B)	업체규모(B/A)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132,370	1,896,601	14.3	4,277	38,915	9.1	3.2	2.1
정보서비스	1,285	27,611	21.5	14	57	4.1	1.1	0.2
금융	20,302	266,631	13.1	905	9,801	10.8	4.5	3.7
보험및연금	8,271	275,763	33.3	311	6,469	20.8	3.8	2.3
금융보험관련서비스	8,920	124,072	13.9	307	2,507	8.2	3.4	2.0
연구개발	3,438	116,226	33.8	93	2,028	21.8	2.7	1.7
전문서비스	30,648	297,004	9.7	648	3,551	5.5	2.1	1.2
기타과학기술서비스	16,427	226,340	13.8	577	5,015	8.7	3.5	2.2
기타전문 서비스	15,987	50,171	3.1	530	1,068	2.0	3.3	2.1
사업지원서비스	27,092	512,783	18.9	892	8,419	9.4	3.3	1.6

2. 여건변화 및 전망

(1) 「경제의 서비스화」 가속화 및 신 서비스 수요증대

- 금융, 물류, 사업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하는 등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 수요 및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부가 서비스산업 부각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에너지·환경문제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경제성장 전략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정부는 2009년 1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5개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가선정

(3)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기업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 생산부문에서 지식집약화, 생산코스트의 구조변화 등으로 생산활동의 전문화 및 아웃소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 기업지원 서비스는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충남 지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4) 충청 광역경제권으로의 경제권 확대

- 충청 광역경제권으로의 경제권 확대에 따른 지역의 산업과 서비스의 교류 증대에 따라 충남, 충북, 대전지역의 산업교류 확대
- 세 지역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의 산업 및 서비스의 강점 요인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지원서비스의 통합 공동운영, 기반시설의 공동 투자 등 광역화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 공공의 생산자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 협력할 필요가 있음

(5) 사회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고급화 진전

-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양적증가가 예상되며, 소득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도 높아질 전망
- 다만, 사회 서비스 공급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못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이탈될 수도 있음

3. 목표 및 정책 방향

(1) 기업지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지역산업 생산성 제고

- 기업의 니즈(needs)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생산자 및 사업서비스 외에도 개별 기업간,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협력중개 지원 및 네트워킹 지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술, 정보, 컨설팅, 인력, 교류활동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 기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민간의 생산자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고도화 시킴. 또한 이러한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함

(2) 신산업 창조를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新 서비스 산업 창출을 적극 도모
- 헬스케어(health care)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 아울러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및 도내 선도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사회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및 산업화 도모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사회 서비스 부문의 민간참여 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공공부문 주도에서 향후 시장중심의 사회 서비스 산업화로의 전환을 도모

(4) 충남 전략산업 및 충청 광역경제권차원 선도산업 관련 산업 육성

- 충남의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산업과 관련 산업들을 유치 및 육성하여 연관된 산업들의 생산자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를 시킴
- 농축산바이오산업은 농업, 농촌개발 정책과 연계하고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를 도모

4. 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

공간계획연구부 신동호 책임연구원

1. 대내외 여건변화

① 경제성장 대비 지역 고용창출력 미흡

■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충남 고용증가율

- '00~'08년 기간 중 전국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4%씩 증가함
 - 충남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침

<표 3>취업자수 추이

구분	2000	2008	연평균증가율 (‘00~’08)
	(천명)	(천명)	
전국(A)	21,156	23,577	1.4
충청남도(B)	891	973	1.1
(B/A)*100	4.2	4.1	-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심화

-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 확대 vs. 고용창출력 지속적 감소
 - 연평균 경제성장률('00~'08) : 충남(9.0%), 전국(4.6%)
 - 충남 GRDP 중 제조업 비중 : 34.0%('00) → 49.8%('08)
 - 취업계수(취업자수/GRDP 10억원) : 28.8명('00) → 17.9명('08)
-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 지속적 감소

<그림 8> 도내 지역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추이



②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

■ 고용흡수력 둔화로 인해 고용회복속도 더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도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생산둔화 및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감을 야기한 바 있음
 -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도내 경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과 병행한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시 말해,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음
 - 즉,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의 효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경기회복세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임
- 더욱이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집중 흡수되어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도 상존함
 -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

■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현상 지속

- 좋은 일자리(descent job) 부족은 청년층의 일자리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소위 '일하지 않고 일하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니트족을 양산하는 경향
 - 최근 국가주도의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십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대책은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이러한 니트현상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노출

2. 현황 및 추진실태

■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대책

- 중앙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 청년인턴십 등을 추진함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

- 청년인턴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층(15~29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인턴, 행정인턴, 중소기업인턴 등 다양한 인턴십 제도 시행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대책사업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행

■ 한계점

- 동 대책들은 당초 취지인 실업자 흡수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높이는 결과 및 실업대책간 상충관계(trade-off)를 야기하기도 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시행 후 공공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발생, 저소득층의 참여부진, 사업종료 후 참여자 대책부재 등의 한계를 노출함
- 청년인턴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 전망이 어두운 실정
- 끝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간 사업내용의 차별성 한계로 일자리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나타남(예를 들어, 희망근로 참여자가 공공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일을 하거나 자활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

3. 기본구상(비전체계)

① 비전체계



② 정책방향

■ 주민발의(local initiatives)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민간주도의 고용창출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기존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방식(Local Initiatives Program, LIP) 도입

■ 지역공동체(community)자립기반 마련

- 지역공동체의 참여유도를 토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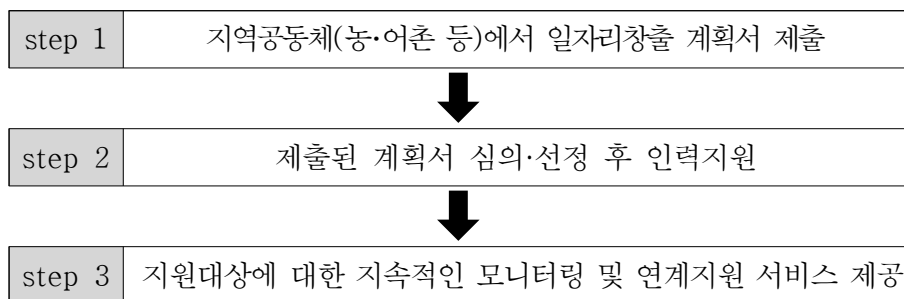
■ 지역단위(area-based) 지속적·생산적 일자리 확대

- 농·어촌 등 고용취약지역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해당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 지역단위에서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③ 추진전략

■ 주민발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Local Initiatives Program, LIP) 추진

- 기본 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모델 발굴
 -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구비
- 운영방식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지원규모 : 당해년 일자리 창출 전체예산 또는 공공근로 인력 중 일정비율(%)
 - 지원대상 : 자영 농축어가, 영농법인, 주민단체 및 조합
-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
 - 지원분야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분야 및 경제활성화 전 분야
 - 지원방식 : 소정 양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계획서와 관련서류 on-off line 제출
- 선정방식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계획서의 수익성(경제성), 일자리 창출규모 및 지속성, 공공근로 인력투입의 가능성(합법성)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후 면접 및 현장확인
 - 지원내용 : 신규 일자리 임금 또는 공공근로 인력의 일정비율(%)
- 운영주체 : LIP 추진본부 구성
 - 道 및 16개 시군 관련 실과
 - 전문가 그룹 구성(교수 +농어촌 단체 +정책실무자 등)

5. 수요자 중심의 強小(small & strong)기업 육성방안

공간계획연구부 신동호 책임연구원

1. 대내외 여건변화

①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그리스발(發) 유럽재정 위기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두바이 사태, 그리스발 유정재정 위기 등 일련의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유럽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확대,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들 수 있음
- EU 와 IMF의 7,500억 유로 유럽안정기금 조성계획 발표로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럽경제에 부담요인

■ 국내 및 도내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유럽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원거리 일뿐 아니라 수출과 수입 등 교역량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국내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다만, 유럽재정 위기가 재점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면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금리, 환율, 주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아가 이로 인해 경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② 경기회복세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vs. 불확실성 증대

■ 중소기업 경영환경 여건

-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세계경 제도 회복세를 보임
 - 세계 경제성장률(IMF, %)전망 : ('08) 3.0 → ('09) -1.1 → ('10) 3.1
- 세계경제는 양호한 경기흐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

능성,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과 같은 불안요인들도 존재

<표 4>중소기업 경영환경 여건

유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회복 ·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완만한 회복 ·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 FTA체결에 따른 신규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인상 가능성 · 보증규모와 만기연장 축소 ·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 고용 없는 경기회복

2. 현황 및 추진실태

■ 충남도는 2009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9개 분야 39개사업에 총 1,179,510백만원을 투입함

- 9개 지원분야 중 금융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총 70.6%인 832,600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금융지원 4개 사업 중에는 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이 577,000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 반면, 기업현장 지향의 지원체계 확립분야에는 가장 적은 1,130백만원(0.1%)을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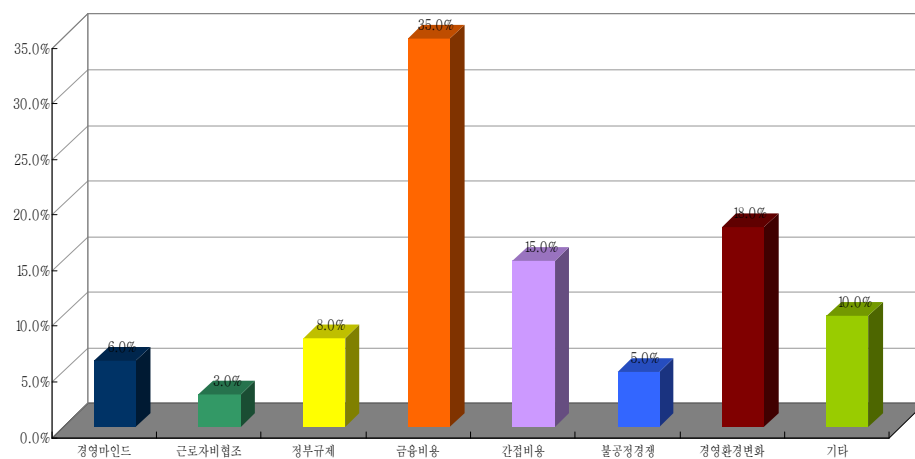
<표 5> 2009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투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	사업비	재 원 별(백만원)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계 (9개 분야)	39	1,179,510	257,290	57,922	44,954	819,344
1. 중소기업 금융지원(보증 등)	4	832,600		22,600		810,000
2.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확대	6	3,138	776	2,327		35
3. 기업현장 지향의 지원체계 확립	5	1,130		430	700	
4.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3	35,241	13,546	5,500	15,894	301
5. 전략적 투자유치 및 창업 활성화	5	62,647	30,600	17,047	15,000	
6. 산업용지 적기 공급	2	181,691	174,406	513	6,772	
7. 기업 맞춤형 산업인력 지원	3	4,116	2,519	1,076	521	
8. 산기술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5	18,872	10,543	2,785	560	4,984
9. 신성장동력 창출·전략산업 육성	6	40,075	24,900	5,644	5,507	4,024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2009.8) 결과 :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은 **금융비용 조달**

- 경영애로 요인으로서는 금융비용조달이 전체 응답기업 중 35.0%(36개 업체)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환경변화(18.0%, 18개 업체), 간접비용(15.0%, 15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 전체 사업비의 70.6%를 금융분야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음

<그림 9> 기업경영애로의 직접적 원인



3. 기본구상(비전체계)

① 비전체계



② 정책방향

■ 수요자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 중소기업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존 공급자(지원기관) 중심의 지원사업을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밀착형 지원으로 전환

■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그리고 관련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수혜범위 확대

■ 지역단위(area-based) 지원시스템화

- 지원기관간 지역단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절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관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

③ 추진전략

■ 자금활용 효과성 제고 및 대출프로세스 개선

- 기금의 과잉조성 보다는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로 보증의 승수효과를 활용
 - 대출의 최종심사 및 결정기관은 보증기관이라는 점에서 보증기관의 출연금 확대로 보증한도를 확대
 - 용자조건 및 상환조건을 개별 기업실정에 맞도록 다단계화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기관간 협력을 통해 원-프로세스(one-process)대출체제 구축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신용대출 기반 강화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취급하는 협력은행의 신용평가기능 강화하되, 지역신용보증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우량기업 신용보증 차등화, 기업규모에 대한 이차보전을 차등화, 생산성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정책자금별 사업목적과 지원방식, 지원분야를 차별화하여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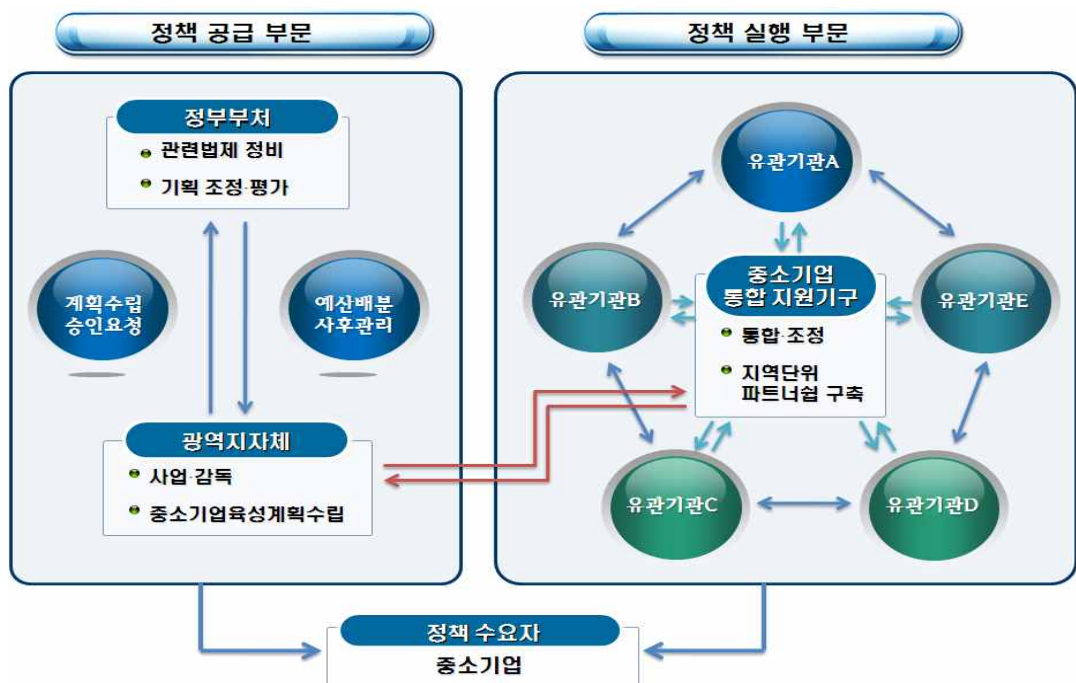
되, 정책자금의 사업적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 개발

-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체계 개선

- 정책금융의 단순체계화,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조정,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다원화, 정책금융 관리조직의 효율화 도모

■ 지역단위(area-based)의 통합적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지원주체 및 사업의 분절화에 따른 유사·중복성, 중앙정부 주도 및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要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를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단순화·종합화·체계화 도모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산사전 조정을 통해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전달체계 개선
- # 1안 : 충남 테크노파크(TP)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 동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충남도가 공동운영하는 형태를 갖추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율성 및 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 도입
- # 2안 : 제 3섹터를 설립하는 방안
 -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기업성을 결합한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



■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One-stop Solution Platform) 구축

- 공급자와 수요자(중소기업지원기관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자(개별 중소기업지원기관)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 지원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 현행 법·제도하에서 특정기관이 모든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지원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줄 중개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도입기능
 - 첫째, 입지, 자금, 신용보증, 판로, 인력, 수출, 경영, 기술·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간에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
 - 둘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관련 정보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DB화하는 기능을 담당
 -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기능을 담당

■ 중소기업지원 운영위원회(가칭) 조직·운영

-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시책 및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들이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과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고, 관련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제공토록 유도
 - 파트너십을 토대로 관련 지원기관을 모두 참여시키는 통합적 협의조정기구인 중소기업지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관들이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 부여

6. 산업단지 개발분야 경제정책 운영방향

공간계획연구부 김양중 책임연구원

1. 대내외 여건변화

<표 6> 대내외 여건변화

환경변화			대응방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시대 진입 ▶ 고용 없는 성장 지속 ▶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 금융 불안 지속(투자위축) ▶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맞춤형 산업공간제공 ▶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 강조 ▶ 지역전략산업의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구축 ▶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강화 	

- 향후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세계적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은 갈수록 격화
- 충남은 타시도와 기업유치에 있어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으며 기업유치는 지역의 발전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경기침체 및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충남의 기업유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 '07년도에는 1,00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08년 855개, 09년 817개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수도권 이전기업도 매년 감소

<표 7> 충남의 연도별 유치기업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치기업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855	817
수도권 이전기업	4	6	19	22	73	114	378	292	282

- 따라서 새로운 투자유치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맞춤형 기업지원 등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의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

2.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은 '10년 현재 총 134개 단지 106,973천㎡(3,236만평)을 지정하여 전국 대비 7.8%로 전국 6위
- '10년 6개의 일반산업단지와 2개의 농공단지 지정계획

<표 8> 충남의 산업단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5개 단지	완료 3개소 10,850천㎡ / 조성 중 2개소 15,561천㎡
일반산업단지	41개 단지	완료 16개소 14,532천㎡ / 조성 중 25개소 43,757천㎡
농공단지	86개 단지	완료 71개소 10,944천㎡ / 조성 중 15개소 2,297천㎡
기타단지	2개 단지	2개 단지 9,032천㎡(완료)

-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수요 및 분양률 감소
- '07년까지 분양실적은 97.5%이었으나 '08~'10.3월까지 분양실적은 41%로 감소
-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 조성완료 71개 단지 중 10년 이상이 6개단지, 15년 이상이 21개단지, 20년 이상이 25개단지로 노후화되어있고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상태
- 단지내 기업 또한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고 이익률이 낮아 경영·체질개선 필요하며 인력수급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산업단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표 9> 산업단지 지역별 현황 ('10. 3. 31. 기준)

구 분	지정면적 (누계, 천㎡)	경 제 규 모(1/4분)		
		고 용(명)	생산액(억원)	수출액(백만\$)
계	106,973	-	-	-
북부권	75,053(70%)	64,882(74%)	27조 4,187(90%)	8,424(93%)
서해안권	12,853(12%)	5,437(6%)	9,494(3%)	29(1%)
내륙권	14,590(14%)	11,799(13%)	1조 4,254(5%)	235(3%)
금강권	4,477(4%)	5,893(7%)	5,936(2%)	227(3%)

3.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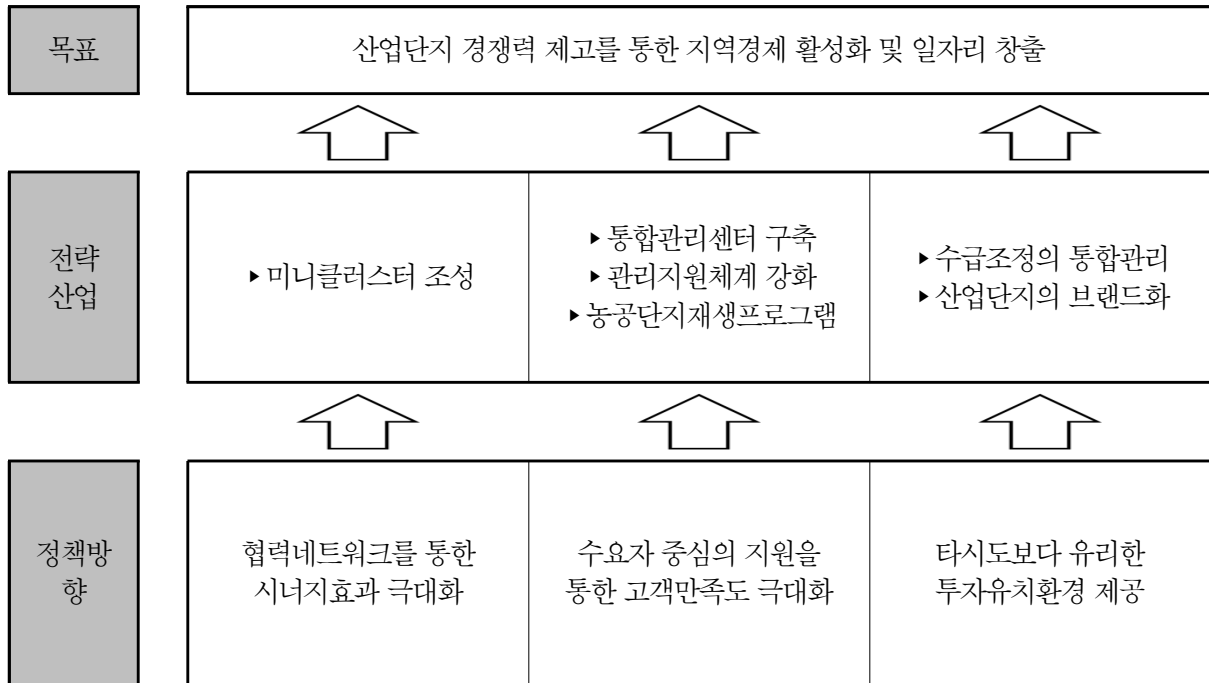
- 충남 산업단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환경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불리한 환경에 적극적 대응

<표 10>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정책방향			주요내용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시너지 극대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정보, 경영애로, 인재양성 등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생산, 연구, 개발, 전시, 판매 등의 복합 산업단지 조성
	고객 만족도 극대화	산업단지 관리·지원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관리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 ▶ 노후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추진
	환경개선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제공 (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 수급조정의 통합적 관리 ▶ 계획입지를 통해 환경훼손과 오염 최소화 ▶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 생태산업단지 구축
균형발 전	균형발전	단지 조성시 권역별 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인센티브(인프라, 입지보조금 등) 지원책 마련

4. 목표

<표 11> 목표 및 전략산업



-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지원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일류산업단지 형성
 -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니클러스터 조성, 통합관리센터 구축, 관리지원체계 강화, 노후 농공단지 재생, 산업단지의 브랜드화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5. 추진전략

①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1) 미니클러스터(산·학·연협의체) 조성

-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기술 등을 연계·협력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현재 산업단지공단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권의 특화산업은 IT (전기전자 및 관련산업) 임

<표 12> 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 추진 현황

- 12개 클러스터 대상단지를 25개 거점단지와 인근 연계단지로 확대
 - 거점단지 : 25개(국가단지 14, 일반 9, 농공 2개 단지)
 - 연계단지 : 168개
- 55개 미니클러스터를 단지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80여개로 확대
 - 유사중복 및 활동이 부진한 미니클러스터는 자율적으로 통폐합 유도

<충청권 비전 및 특화산업>

비전	대한민국 NEW IT 허브구축
특화산업	IT(전기전자 및 관련산업)
거점 및 연계	거점: 아산국가, 천안일반, 청주일반, 오창과학, 충주 연계: 일반 10, 농공 31

<표 13> 충남의 미니클러스터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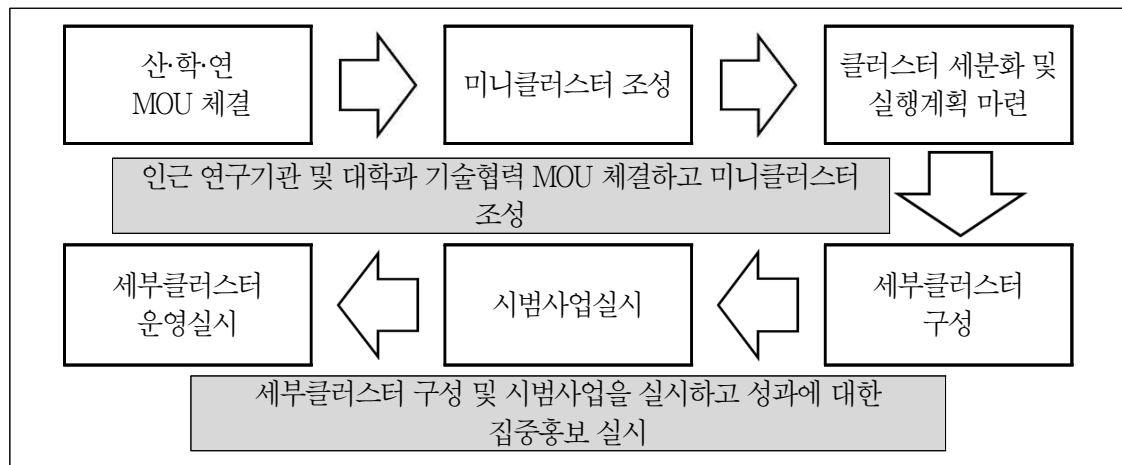
- 거점단지 2개소, 연계단지 19개소 지정 완료
- 산업단지 클러스터 21개소 지정('10.2)
 - 거점 (2개소) : 아산국가산업단지, 천안일반산업단지
 - 연계(19개소) : 일반산업단지 5개소(탕정테크노, 탕정2 천안산업기술, 천안 마정, 아산 인주), 농공단지 14개소
- ➔ 산업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3개 産學研협의체(미니클러스터) 구성·운영('10.4)

- 충남은 거점단지 2개소와 연계단지 19개소 지정을 완료
- 충남은 충남의 4대 전략산업중심으로 미니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클러스터 세분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 업종·기술 분야별 산·학·연이 참여하는 세부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단지내 입주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

<표 14> 미니클러스터 세분화(안)

미니클러스터	자동차부품 (산업부품소재)	전자정보 (디스플레이)	농축산바이오 (농공단지)	첨단문화
미니클러스터 세분화	의장모듈 엔진모듈 차체/사시 파워크레인 소재경량화	LCD LED OLED 반도체	동물자원 인삼약초바이오 농생명바이오	영화 음악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표 15> 세부 클러스터 추진계획



②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

1) 통합관리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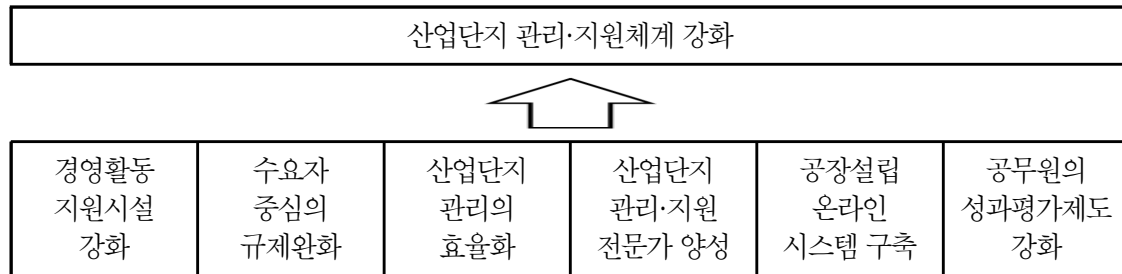
- 입주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ONE-STOP 해결을 위하여 산업단지 통합관리센터 구축(충남의 랜드마크 비즈니스센터 구축) 필요
- 창업 및 공장설립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세무·회계·노무·법률), 물류지원, 정보지원 등 ONE-STOP 행정지원

<표 16> 타시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예

경기 시화비즈니스센터	대구 성서비즈니스센터
▶ 사업개요 위 치 : 시화산업단지내 기 간 : 2009~2011(3년) 규 모 : 부지 4,944㎡, 연면적 15,840㎡ (지하 1/지상 11) ▶ 소요예산 : 총 267억원	▶ 사업개요 위 치 : 성서 제1산업단지 내 기 간 : 2008~2011(4년) 규 모 : 부지 6,612㎡, 연면적 14,523㎡(지하 1/지상 10) ▶ 소요예산 : 총 268억원

2) 산업단지 관리·지원체계 강화

<표 17> 산업단지 관리·지원체계 강화 방안



-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강화
 - 공동물류센터, 공용파이프랙, 지리정보시스템, 기업정보시스템, 복지시설 등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규제완화
 -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법령개정(고객만족조사, FGI 등 의견수렴)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제도개선(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층검토)
-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화
 -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을 우선유치업종으로 지정
 - 업종제한 및 건축가능 시설물의 범위제한 완화
- 산업단지 관리·지원 전문가 집중 양성
 -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업무수준 및 경력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공장설립 온라인시스템 구축
 - 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을 공장설립 온라인시스템으로 개편하여 '11년 전국 확산을 추진 중
 - 공장설립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강화
 - 직무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3)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추진

- 충남의 86개 농공 단지(조성완료 71, 조성중 12, 실시계획 수립중 3) 중 10년 이상 6, 15년 이상 21, 20년 이상 25개 단지로 시설 노후화
- 10년 이상 노후단지 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영·체질개설 필요

- '11년부터 오·폐수 처리기준 강화, 배출기준 충족 한계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수급, 경영 등 해결할 문제 산적
-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추진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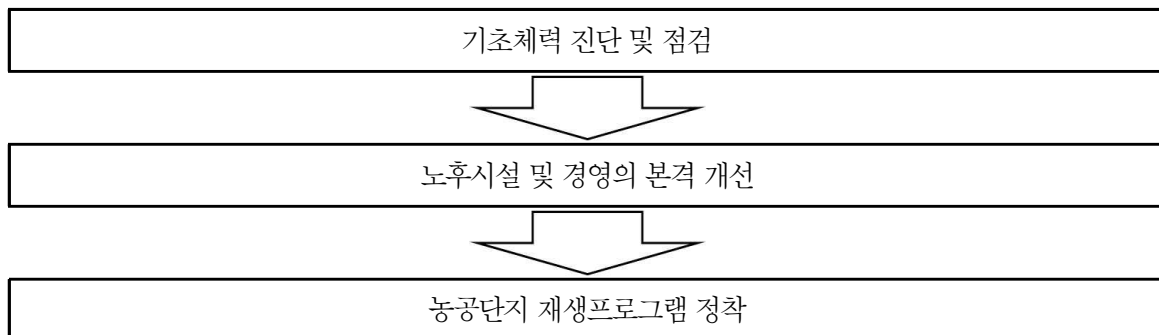
<표 18>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비전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농공단지		
전략	신규 농공단지 확충	농공단지 역량 강화	지역향토산업 육성
핵심 추진 과제	입지규제완화	관리운영방안 개선	지역특화단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면적·건폐율 완화 · 입지선정기준 완화 · 입주제한업종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전문성 향상 · 통합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의 완화 · 보조금 지원확대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	입주기업 지원 강화	특화상품 업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유자금리 개선 · 폐수종말처리시설 · 설치비 지원 상향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연계협력 · 경영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확대 · 판로지원 확대

자료: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2007)

-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실행 계획 수정·보안

<표 19>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실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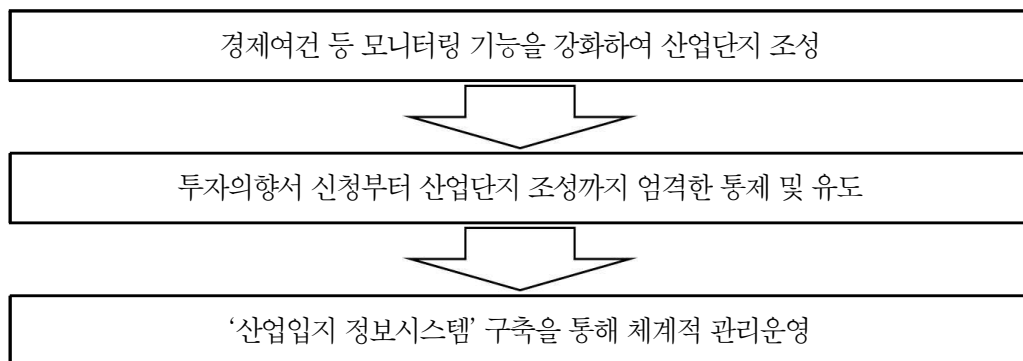
- 시설정비와 더불어 지역전략산업과 향토산업을 연계한 미니클러스터 조성

- 충남의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중심으로 미니클러스터 조성하여 생산제품의 거래처 발굴과 판로확보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농공단지의 기술 및 인력 지원 기능 강화
 - 산·학·연 교류강화를 통해 농공단지의 기술·인력애로 등 집중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원방안 별도 마련
- 농공단지 규제완화
 - 타지역 보다 유리한 환경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③ 타시도보다 유리한 투자유치환경 제공

1) 산업용지 수급조정의 통합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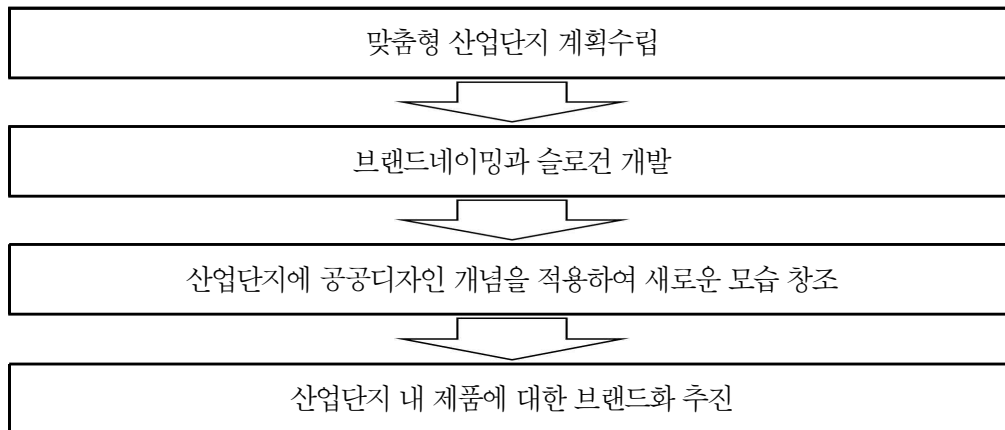
<표 20> 산업용지 수급조정의 통합관리



-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수요 및 분양률 감소
- 대부분, 수요예측 없이 건설업자·특별법인 주도로 산업단지 개발
 - 도내 134개 단지 중 건설업자·특수법인 개발 → 50개 단지(37%)
- 투자의향서 신청부터 산업단지 조성까지 엄격한 통제 및 유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입지 지정 제한
 - ※ 권역별 물량조정, 미분양률 30% 이상 지역 제한제도 등 활용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8월), 각종 입지정보서비스 제공(기업유치)

2) 산업단지의 브랜드화

<표 21> 산업단지 브랜드화



○ 개별산업단지에 적합한 브랜드네이밍과 슬로건 개발

- 기업유치시 산업단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네이밍과 슬로건 공모

예) 포항국가산업단지

브랜드네이밍	포항블루밸리(Pohang Blue Valley)
슬로건	동해안 녹색성장 시대의 중심

○ 일률적이고 획일적 환경의 산업단지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모습의 산업단지로 변모

- 산업단지를 상징하게 될 새로운 Symbol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기업안내 Sign 제작

○ 아울러 제품의 브랜드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예)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 섬유 공동브랜드 “베이베이”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반월시화산업단지 클러스터추진단과 섬유공동브랜드 추진단이 공동으로 개발